KASPA 김중규행정학아카데미

2014 7급 지방자치론 기출문제
(2014.10.11 시행)

선행정학 지방자치편만 제대로 이해했다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평이한 출제였습니다. 7급 지방자치론은 별도의 교재로 따로 공부하지 않고 선행정학 기본서의 자치편만 가지고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해준 출제였습니다. 9급수험생들도 지방자치론을 따로 공부하지 않고 헌법과목만 추가로 공부하신다면 얼마든지 지방7급에 도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중규 –

0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비중
②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
③ 전체공무원 대비 지방공무원 비율
④ 조세총액 중 지방세 비율

(답) ②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나 비중은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지만 종류는 이와 무관하다.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

(1) 특별지방행정관서의 종류와 수 : 수가 많으면 중앙집권적이다.
(2) 지방자치단체 중요직위의 선임방식 : 중앙에 의한 임명은 중앙집권적이다.
(3)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수 : 국가공무원의 수가 많으면 중앙집권적이다.
(4) 국가재정의 총규모와 지방재정의 총규모 : 국가재정의 비중이 더 크거나 지방세보다 국세의 비중이 크면 중앙집권적이다.
(5)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집행 및 회계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의 폭과 강도 : 중앙정부의 통제강도와 빈도가 높으면 중앙집권적이다.
(6)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구성비율 : 고유사무보다 위임사무의 비중이 많거나 위임사무 중에서도 기관위임사무의 비중이 많으면 중앙집권적이다.
(7) 민원사무의 배분비율 : 중앙정부가 민원사무의 상당부분을 관장하는 경우라면 중앙집권적이다.
(8) 감사 및 보고의 횟수 : 중앙으로부터 감사나 보고요구의 횟수가 많으면 중앙집권적이다.

02.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에 대한 집행기관의 통제수단이 아닌 것은?

① 재의요구권 ② 서류제출요구권
③ 제소권 ④ 선결처분권

(답) ② 서류제출요구권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수단이다.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상호간의 권한

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권한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권	·서류제출 요구권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의안발의권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권
·임시회 소집요구권 * 의회해산권은 없음[1]	·예산·결산 승인권 *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결의권은 없음[2]

1)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대통령중심제방식)이므로 의회해산권이나 단체장 불신임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단, 지방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권은 인정된다.

03. 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기준에 의한 시·도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 · 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② 시 · 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한 사무
③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 · 조정 등의 사무
④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답) ② ②는 전형적인 고유사무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사무로 적합한 사무이다.

04. 협력적 정부 간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원인이 아닌 것은?

① 비선호시설 입지로 인한 지역 간 부정적 외부효과가 증가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간 하위목표와 정책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③ 신중앙집권화 경향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있다.
④ 광역적 처리를 필요로 하는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답) ③ 지역간 갈등과 광역행정의 필요성 증대로 지방정부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진다. ③의 경우 신중앙집권화로 인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약화는 지방정부가 협력의 필요성을 오히려 감소시킨다.

05. 세외수입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세외수입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② 세외수입은 응익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③ 세외수입은 종류가 많고 그 수입근거와 형태도 다양하다.
④ 세외수입은 지역별, 연도별로 차이가 크다.

(답) ① 세외수입은 용도가 정해져있지 않은 일반재원도 있지만, 비용용도(비도)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예 : 사용료, 매

각대금, 과징금 등)

06.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이다.
③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 ③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조례가 아니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조).

07. 지방공공재 공급에 대한 티보(Tiebout)의 가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주민들은 이주할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할 때 규모의 경제효과를 고려한다.
②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③ 상이한 가격(조세)으로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
④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답) ① 규모의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한다.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생산비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규모수익 불변의 원리를 전제로 한다.

● 티부가설의 기본가정

· 다수의 지역사회(지방정부) 존재
· 완전한 정보 – 정보의 균형화
· 지역 간 자유로운 이동 – 완전한 이동
· 단위당 평균비용 동일 – 규모의 경제 작용X ,규모수익 불변
· 외부효과의 부존재
·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 – 동일한 고용기회
· 한 가지 이상의 고정적 생산요소 존재
· 최적규모의 추구 – 규모가 크면 주민 유출, 작으면 주민 유입

0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가 존재한다.
③ 기준인건비제는 기존의 총액인건비제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답) ④ 안전행정부장관이 매년 기준인건비를 정해주면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행정기구와 정원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용한다.

☑ ① [O] 기준인건비제도의 목적을 설명한 맞는 지문이다.
② [O] 총액인건비제도가 기준인건비제도로 전환되면서 기준인건비에다가 3%이내의 추가자율운영범위를 인정하여 정원관리의 실질적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③ [O] 2014.1부터 종래의 총액인건비제도가 기준인건비제도로 대체되었다.

09.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부담은 부담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단체위임사무의 국가 감독은 기관위임사무에 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③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 감독은 합법성 위주의 감독이다.
④ 단체위임사무에 따른 배상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이다.

(답) ① 기관위임사무는국가사무이므로 그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비교

구분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중앙의 감독	적극적(교정+예방)	소극적(교정)
지방의회의 관여	불가	가능
경비부담	국가	지방 및 국가
이해관계	국가	국가 및 지방
법정조치	불요 (직권위임)	필요 (법정위임)

10. 지방채의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재정 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법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연대책임을 진다.
④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 ② 자치단체장은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 지방체를 발행할 수 있다. 차환(借換)이란 기존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지방의회의 지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의사결정기관	ㄴ. 입법기관
ㄷ. 비판 · 감시기관	ㄹ. 헌법기관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답) ④ ㄱ, ㄴ, ㄷ, ㄹ 모두 맞다.

☑ ㄱ [O] 의결기관
ㄴ [O]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는 자주입법기관
ㄷ [O] 집행기관을 감시·비판하는 기관
ㄹ [O] 지방의회는 헌법에서 설치를 의무화한 헌법상기관

1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방식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시 · 도의 자치사무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의 감사
② 확정된 예산에 대한 시·도지사의 안전행정부장관에의 보고
③ 시 · 도가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
④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시 · 도지사의 직무해태 시 주무부처장관의 직무 이행명령

(답) ② ①③④는 강제력과 구속력이 인정되는 중앙통제인 반면, ②는 구속력이 없는 통제방법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사후에 보고할 따름이다.

13. 제3섹터 방식의 지방공기업 설립배경이 아닌 것은?

① 공공부문의 자금 부족
② 민관협력부분의 확대
③ 공공영역의 기업화 경향
④ 공공성의 강화

(답) ④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공기업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제3섹터는 지방공기업의 일종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정부가 1/2미만을 출자한 민관공동출자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한 민관공동생산체제(지방제3섹터)를 말한다.

14. 지방자치법 상의 기구 중 참여당사자를 기준으로 볼 때 성격이 다른 것은?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② 행정협의회
③ 지방자치단체조합
④ 시·도지사협의체

(답) ① ②③④는 모두 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광역행정기구들로서 자치단체가 참여당사자이지만, ①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로서 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이 참여당사자이다.

15. 대도시 자치구 폐지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도시 정부도 다른 지역과 같이 2계층이 되어야 한다는 형평의 논리에서 출발했다.
② 인위적인 구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수 없다.
③ 많은 국가에서 대도시 지방정부는 그 일체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위 지방정부를 두지 않고 있다.
④ 광역행정을 실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일상적 행정수요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답) ④ 광역행정은 자치구역보다 넓은 구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실시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일상적 행정수요를 경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16.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 관여가 이루어진다.
② 지방적 이해와 국가적 이해를 동시에 가지는 사무이다.
③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보조로 지원되는 사무이다.
④ 예방적 감독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답) ③ ③은 단체위임사무가 아니라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이다.

●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비교

구분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중앙의 감독	적극적(교정+예방)	소극적(교정)
지방의회의 관여	불가	가능
경비부담	국가	지방 및 국가
이해관계	국가	국가 및 지방
법정조치	불요 (직권위임)	필요 (법정위임)

17. 주민참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소송제도의 제도적 보완장치이다.
② 우리나라의 주민발안제도는 직접발안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③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
④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관리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답) ③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주민소환의 경우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내, 임기만료일부토터 1년이내,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

☑ ① [X] 주민소송제도가 주민감사청구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주민감사청구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또는 단체장이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요구를 불복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민소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X] 우리나라 주민발안제도에 해당하는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고 지방의회기 이;를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간접발안형태를 띤다.
④ [X] 주민투표는 투개표관리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다.

18. 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답) 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제26조)

19.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수한 의미에서의 공공서비스는 비경쟁성을 특징으로 한다.
② 공공서비스는 많은 경우 배제성을 지니지 않는다.
③ 무임승차는 비배제성보다는 비경쟁성과 관련이 있다.
④ 순수한 공공서비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답) ③ 무임승차(free-fiding)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이용에서 배제시키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므로 비경합성보다는 비배제성에 기인한다.

☑ ① [O] 공공서비스는 자신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비경쟁성(비경합성)을 띤다.
② [O] 공공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에서 배제당하지 않는 비배제성을 띤다.
④ [O] 외교, 국방, 치안 등 순수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20.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지와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와 설치는 법률로 정한다.
④ 리(里)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답)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지와 설치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한다.

☑ ② [O]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의 변경은 법률로 하지만 한자명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O] 자치단체의 폐치분합(폐자설차분라합병)은 법률로 전한다.
④ [O] 자치단체가 아닌 읍·면·동·리의 폐치분합 및 명칭·구역 변경은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치단체 명칭 및 구역개편 절차

·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폐치분합)	법률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함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 ·자치단체의 한자 명칭 변경	대통령령	
·행정계층(읍·면·동)의 명칭·구역 변경	조례	안행부장관 승인